

# 반도체 패권 잡기 ‘전의 전쟁’... 美, 삼성전자에 9조 지원

삼성, 텍사스주에 패키징 시설 건설 최소 2만개 넘는 일자리 창출 전망  
美서 파운드리 추가 등 투자 계획 텍사스 현지서 지역 경제 회복 기대

반도체 시장 패권을 잡기위한 ‘전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에 한화 기준으로 약 9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득이 되는 행보로 풀이된다.

미국은 삼성의 미국 텍사스주 반도체 패키징 시설 건설 등 대규모 투자로 인해 최소 2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삼성은 반도체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통해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지원을 위해 최대 64억 달러(약 8조 9000억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390억 달러를 연내에 모두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는 러몬도 장관. /뉴스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20억~30억 달러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며,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66억 달러)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전날 브리핑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 장관은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은 2개의 반도체 생산 시설과 연구 센터 및 패키징 시설을 지원하는 데 쓰일 것”이라며 “또한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확장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미국에 파운드리 라인을 추가하고 첨단 패키징 공장까지 짓는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텍사스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3조5000억 원)를 투자해 건설 중인 테일러시 공장에 새 공장을 건설하고, 패키징 시설과 함께 첨단 연구개발(R&D) 시설을 신축한다는 목표다. 삼성전자는 현재 테일러시에 4나노미터(nm) 이하 초미세 공정을 위한 파운드리를 짓고 있다. 추가되는 공장 역시 수nm급 공정을 위한 파운드리 기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은 오는 2030년까지 총 약 45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투자 규모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미국 텍사스 현지에서도 지역내 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현지에서 창출할 대규모 일자리가 최소 2만여개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 일간지 텍사스 트리뷴은 “최소 1만 7000 개의

건설 일자리와 4500개 이상의 생산적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실제 삼성은 현지 반도체 우수인력 육성을 위해 4000만달러(약 550억원) 규모의 기금도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 지원금에 따른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은 삼성의 현지 시장 선점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에는 글로벌 반도체 설계(팹리스) 기업들이 다수 포진돼 있는 만큼 반도체를 현지에서 생산하게 되면 고객사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첨단 패키징 팹 시설은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파운드리 및 패키징을 두고 삼성은 물론 TSMC, 인텔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 전체를 공정한 서비스를 통해 북미 고객사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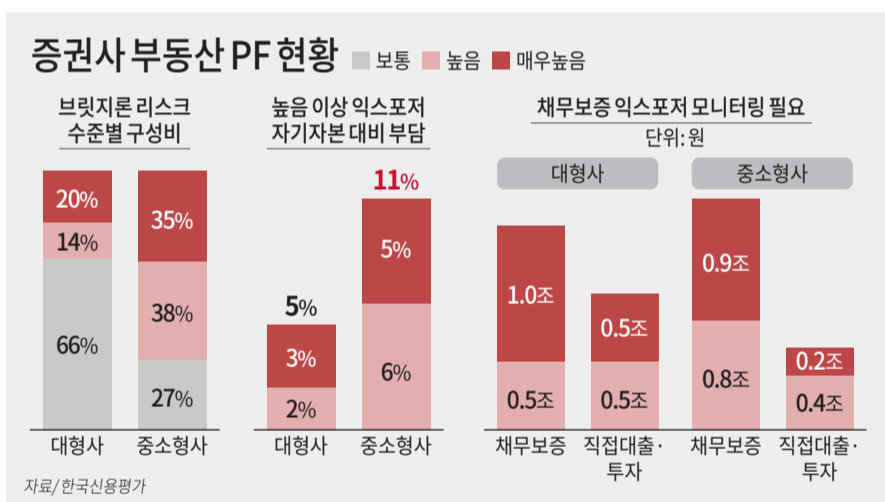
# 증권사, 부동산PF 총당금 추가 적립 ‘불가피’... 중소형사 ‘비상’

한신평, ‘부동산PF 스트레스 테스트’ 중소형사들 재무 위험 더욱 높아져

국내 증권사들이 지난해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로 총당금을 쌓아 왔지만, 올해도 적립금을 추가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후순위 비중이 높은 중소형사들의 재무 위험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의 지난해 9월말 기준 최종 손실 위험이 높거나 매우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익스포저가 약 4조 8000억원, 총 브릿지론의 약 46%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신용평가가 전날 발표한 ‘금융업권 부동산 PF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본PF 19조 5000억원, 브릿지론 10조 6000억원 등 30조 1000억원이다. ‘브릿지론’은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 매입 등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위



험성이 높고, 중후순위 대출일 경우 손실 가능성이 더욱 확대된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브릿지론 관련 총당금 적립 강화 요구로 각 증권사들은 2023년 4분기 중 브릿지론에 대해 상당수 건전성을 재분류하고 총당금을 반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총당금 관련 압박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측에서 추정하던 정도보다 높은 수준의 총당금을 쌓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부동산PF 잔액에 대한 총당금 적립률은 11%(대형사 10%, 중소형사 12%) 수준으로 2023년 9월말 8%(대형사 6%, 중소형사 9%) 대비 완화된 상황이다. 하지만 증권사별로 부동산 PF 포트폴리오의 질적 차이가 주목된다.

김예일 한신평 연구원은 “중소형사의 경우 서울·수도권 선순위 익스포저 비중이 13%로 낮고, 지방·중후순위 비

중은 33%로 높아 위험도가 높다”며 “질적 구성이 열위한 중소형사의 경우는 실질을 고려할 때, 총당금 적립률이 낮아 추가 손실 부담에 일정 수준 노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브릿지론과 본PF를 합한 리스크 수준이 ‘높음’ 이상인 익스포저의 자기자본 대비 부담을 계산했을 때, 대형사가 11%, 중소형사는 22%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브릿지론 내 리스크 수준만 별도로 봤을 때는 ‘높음’ 이상의 익스포저 비중은 대형사 34%, 중소형사가 전체 73%를 차지한다.

나이스신용평가 역시 자체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 중소형사들의 부동산PF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한신평의 경우, 국내 25개 증권사를 2023년 말 기준 자기자본별로 초대형사(5조원 이상), 대형사(1조원 이상), 중소형사(1조원 미만)로 나눴다.

이예리 한신평 연구원은 “초대형사의 자기자본 대비 추가적립부담이 가장 낮고,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각각 자기자본

의약 3~6% 규모를 추가로 손실 인식해야 한다”며 “이는 대형사와 중소형사가 초대형사 대비 고위험 부동산 PF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짚었다.

초대형사의 경우 본PF의 비중이 78%로 훨씬 높으며, 브릿지론(22%)의 비중은 낮다. 반면,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브릿지론 비중이 30%를 초과한다. 또한, 상환순위가 낮아 비교적 회수 가능성이 낮은 중후순위 익스포저에 한정해 초대형사와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관련 비중이 높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위험 익스포저로 간주되는 중후순위 브릿지론 비중의 경우 초대형사는 8%에 불과하지만,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20%를 상회한다는 부연이다.

이 연구원은 “이러한 보유 부동산 PF 포트폴리오의 차이 때문에 대형사와 중소형사가 기인식한 대손충당금 및 준비금 비중(11%)이 초대형사(6%)를 크게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손실부담이 초대형사 대비 더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국민통합위 “이주민 생애단계별 등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제안

‘자치참여제’ 특위, 18개 정책 제안 “이주민 정착지원·통합정책 밀거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이주배경주민(이주민)들의 정착을 위한 생애 단계별 한국어교육 인프라 구축, 근로자용 실무 한국어 교재 개발, 아동·청소년 입국정보 제공 확대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민통합위는 16일 ‘이주민 자치참여제 특별위원회(특위)’의 18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이주민 관련 학계·언론·현장 전문가 15명으로 구성

된 기구다.

특위는 먼저 “이주민과 이주배경 학생이 일상생활과 학교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언어장벽”이라며 유아·아동·청소년·성인 등 이주민 생애단계별 맞춤형 한국어 교재를 개발해 일선 학교·기업과 한국문화원 등에 보급하도록 했다.

또 학교 밖 이주배경 학생의 한국어 위탁교육을 ‘학교 안’으로 점진적으로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위탁교육이 아닌 내국인 학생과의 통합교육으로 전환하도록 제안했다.

이주근로자의 산업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작업장 유형별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과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운영 지원도 제안됐다.

아울러 고위험 사업장부터 ‘쉬운 한국어’로 된 작업 매뉴얼과 안전보건매뉴얼을 만들어 이주근로자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법무부가 시도교육청에 연 2회 제공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입국정보를 연 4회 제공으로 늘려 진학 시기를 놓치는 이주배경 아동이 없

도록 제안했다.

또 부처간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주민 지원사업을 통합하는 ‘공간통합·정보통합·민원통합’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법무부·여성가족부와 지자체·교육청이 운영하는 이주민 지원 서비스를 통합한 ‘원스톱센터’ 설치, 고용노동부·법무부·여가부 등 이주민 민원창구 일원화, 현행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확대 개선 등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다양한 인구구성이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주민 근로자 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

아닌 활력소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특위 정책제안이 향후 정부의 이주민 정착지원과 통합정책 마련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